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03
----------	-------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 의 자 : 김병주 · 송갑석 · 정성호
한기호 · 양기대 · 윤후덕
안규백 · 허 영 · 기동민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 · 장기 · 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

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로 낙찰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계약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 나.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6항).
- 다.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 라.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 마.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안 제46조의4 신설).
- 바.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사. 계약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안 제59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14. “방위사업계약”이란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

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15.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방위사업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6.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국가와 제14호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방위사업계약”을 각각 “국방조달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제6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특정정보”를 “정보”로, “사항”을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2항제12호 중 “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를 “방산물자”로 한다.

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방위사업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서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계약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 금액은 실제 발생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방위사업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4호가목의 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협력업체에 함께 있는 경우

나. 지체의 원인이 협력업체에만 있는 경우

다.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4호가목의 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계약 수급업체 및 재하도급계약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6.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입찰·낙찰 및 계약의 체결·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사실이 있는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5.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6.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입찰자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위촉된 자는”을 “위촉된 자,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한다.

제62조제4항제2호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u> <u>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u> <u>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u> <u>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u> <u>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u>

<신 설>

<신 설>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정한다)

14. “방위사업계약”이란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15.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
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
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
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
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
치는 방위사업계약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6조(청렴서약제 및 음부즈만제
도) ① -----

6. -----

국방조달계약-----

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
연구기관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
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
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
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
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
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
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
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신 설>

-----국방조달계
약-----

-----국방조달계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위원회의 위원

② -----

-----.

1. (현행과 같음)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
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
항

3.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
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신 설>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
-----사항-----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
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
한 사항

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지에 관한 사항

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p>④ ~ ⑨ (생략)</p> <p>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p> <p>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 11의2. (생략)</p> <p>12. 제34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p>	<p><u>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p> <p>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p> <p>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11의2. (현행과 같음)</p> <p>12. <u>방산물자</u>----- --</p>
--	---

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 14. (생략)

③ ~ ⑤ (생략)

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

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
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정
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을 조달하거나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
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13. · 1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405호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46조(방위사업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단기계약·장기계약
·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
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
조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
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하고, 방위사업계약의 종류·내
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
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에 따른다.

③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
한 경쟁입찰에서는 방위사업계
약의 특수성, 계약의 성질과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할 수 있다.

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④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한 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개산계약의 정산기준 및 정산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⑧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신 설>

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

<신 설>

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
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
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
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
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
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감면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
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한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4호가목의 계약으로

<신 설>

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
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3.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
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
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협력업체에 함께 있는 경
우

나. 지체의 원인이 협력업체
에만 있는 경우

다.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
험조건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
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
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
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4호가목의 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비밀의 엄수) -----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 계약 수급업체 및 재하도급 계약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6.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입찰·낙찰 및 계약의 체결·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
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
는 알선·청탁 사실이 있는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
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
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정보
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
거나 누설한 경우

5.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
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6.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사
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
실이 있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입찰자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통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6조제9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생략)

제62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

-----위촉된 자,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 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제46조의2제1항-----

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 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